첨 부 1

‘석유화학 기후변화 지역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’ 개최결과

□ 목적

○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부터 배출권 할당까지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중장기 대응 안목 향상

○ 정책동향, 시장대응, 감축사업 등 배출권거래제 대응 실무 종합 교육

○ 석유화학업종 내 기후변화 담당임직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

□ 일시/장소 : 2019. 5. 23(목) 13:30~18:00, 여수 엠블호텔 (5층,에어로스2룸)
2019. 5. 29(수) 13:30~18:00, 울산 롯데시티호텔 (2층,펄룸)

□ 참석자 : 석유화학업종 기후변화 담당 임직원 총 62명
(여수_31명, 울산_31명)

□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비 고
13:30~14:00	등록	
14:00~14:10	개회 및 비상대피 안내	석유화학협회
14:10~15:20	국가 온실가스 정책의 이해	에너토피아 박영구 대표
15:20~15:35	Coffee break	
15:35~16:45	배출권거래제 실무 대응 종합	The ITC 김진효 팀장
16:45~17:15	석유화학 감축현황 점검 및 지원과제 논의	에코시안 노충호 수석
17:15~18:00	폐회 및 마무리	

□ 주요내용

1. 국가 온실가스 정책의 이해

○ UN기후변화협약(파리협정) 에 따른 국가 기여(NDC)

- 모든 기후변화당사국은 각 국의 국가 기여(NDC,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를 5년 주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
- 개별 국가가 제출하는 국가 기여는 현재 수준의 기여보다 진전되어야 함
- 온실가스 배출/흡수량 중복 계산 방지

○ 한국의 INDC(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

- 지난 2015년, 한국은 UN에 2030년 BAU(Business As Usual, 배출전망치)대비 37%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
  ·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라는 국제적 기대에 힘입어 시나리오 제3안(25.7%)에 해외 감축분 11.3%를 더한 37%를 최종 목표로 UN에 제출함
  · 산업부분 감축률은 BAU 대비 12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

< INDC 설계 시나리오 >

2030년 감축목표(안)		제1안	제2안	제3안	제4안
감축후 배출량 (백만톤)		726	688	632	585
감축률	BAU 대비	△14.7%	△19.2%	△25.7%	△31.3%
	'12년 대비	5.5%	0%	△8.1%	△15.0%
원단위 개선률	GDP (톤/백만원)	△38.6%	△41.8%	△46.6%	△50.5%
	인 구 (톤/인)	0.9%	△4.4%	△12.3%	△18.8%
GDP 감소 (2030년 기준)		△0.22%	△0.33%	△0.54%	△0.78%

제1안
산업 · 발전 · 수송 ·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 · 계획 중인 감축정책 강화, 비용효과적 저감기술 반영

제2안
제1안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, 건물 ·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재정지원 ·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 추가

제3안
제2안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, CCS 도입 · 상용화, 그린카 보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 ·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 적용

제4안
제3안 감축수단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, CCS 추가 확대 등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 포함

<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('16.12) >

구분	철강	석유화학	정유	제지	시멘트
감축율	11.14%	**10.84%**	9.54%	9.03%	7.04%

○ 국내 정책 현황

-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❶탈원전, ❷탈석탄, ❸신재생에너지확대, ❹에너지수요관리 강화 정책 시행
  · 기존 시나리오 상 감축수단인 CCS(Carbon Capture and Storage)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전 또한 축소되면서 감축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운 상황
-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(2018)
  · 국내 감축목표 상향(25.7%→32.5%) 및 국외 감축목표 하향(11.3%→4.5%)
  · 산업부문 감축률 상향조정(11.7%→20.5%) 되었으며, 기존로드맵 발표 시 산업부문 감축률을 12% 이내로 하겠다는 것과 대비

2.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이슈 논의

○ 배출권거래제 2기 전체 수급 전망

- 2017년 설비 및 배출량 기준 발전부문 연간 9~12%부족, 산업부문 연간1~2% 잉여로 전체 3~5% 부족 예상
- 단, 정부 예비분과 1기 이월배출권, 추가 유입 가능한 상쇄배출권 등을 감안할 경우 2기 전체 수급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

○ 할당계획 개정안 영향 - 배출권 이월제한

- 할당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('19.5.21) 공지를 기점으로 5월초 29,000원대까지 치솟았던 배출권 가격이 공청회 전날 25,500원까지 급락
  · 공청회 공지에는 이월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, 지난 3월 환경부 보도설명자료(거래물량 부족 시 이월제한 검토계획)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출권 가격 하락
- 공청회('19.5.21) 당시 환경부에서는 이월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 물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에 공청회 직후 배출권 가격 27,000원까지 반등
  · 발전사 및 부족기업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○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

- 경매 시행 당시, 경매낙찰가가 일종의 지표로써 시장가를 견인 할 것으로 예상
  · 실제 1~3월 경매에서는 경매 다음날 시장가가 경매가에 맞추어 상승함

	경매 하루전 종가	경매 낙찰가	경매 다음날 종가
1월	25,000원	25,500원	25,500원
2월	25,550원	27,050원	27,050원
3월	26,500원	26,450원*	26,500원

*** 2월 경매 이후, 정부에서 발전사의 입찰경쟁과열에 경고한 결과**

· 한편, 4~5월 경매에서는 경매가가 하락하였으나 시장가는 하락하지 않음

	경매 하루전 종가	경매 낙찰가	경매 다음날 종가
4월	27,600원	26,400원	27,600원
5월	29,000원	27,850원	29,300원

→ 배출권 보유/구매 심리 매우 강하게 작용

3. 시사점

○ 배출권거래제와 할당 쟁점

- 기존 로드맵이 강도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전을 통한 감축수단이 배제되고 국내 감축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업계 부담 강화
- 결국 정책적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되어 3기에는 매우 가혹한 할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
- 3기 할당 방향 전망
  · 정부계획 조기 결정 가능성 존재('19년 중순)
  · 할당계획의 단순화 : 업종세분화 축소 등
  · 업종단위 대응의 한계 : 부문별 할당체제, 로드맵 내 감축률 미공개 등

○ 배출권거래제 정책 이슈

- 배출허용총량 설정 방식 개선 : 국가 온실가스 수정로드맵에 부합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될 예정. 배출허용총량은 곧 할당량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자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
-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유상할당 확대 : 기존 유상할당업종 선정 방식(수출비중 및 부가가치)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확대방안 검토예정
- 기업의 감축실적인정 확대 가능성 : 현재 환경부에서는 감축인센티브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감축실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

첨 부 2

□ 회의사진

여수(5/23)	울산(5/29)